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행하라

- 애도의 진정성은 감상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서 나오는 것

사고 발생, 그 이후의 경과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경, 태안발전본부 운탄설비에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시간이 지난 후였다. 근무 구역을 한 바퀴 도는 데 4시간 정도 걸리니 그 동안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란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 한 것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사고 수습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과 몇 시간 전 함께 저녁밥을 먹은 고인의 시신을 수습했다. 또한 그들은 처참한 모습의 고인을 컨베이어벨트 옆에 두자마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나란히 멈춰서있던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시켜야 했다.

서부발전 사장은 왕족이 아니다

그 후 사측은 이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갔다. 빈소를 찾은 한국발전기술 임원은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막말을 하고 돌아갔고, 이후 유가족은 찾아오는 서부발전, 한국발전 기술 임원들을 분향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김씨의 업무는 순찰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이상이 발견되면 보고를 해야 하고,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내려와 석탄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했다. 요컨대 당사자가 잘못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은 정치 참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그들은 교육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왜 그랬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왕족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사장은 왕족이 아니다. 사장이란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라고 있는 자리이다. 자리 보전을 위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아야 한다. 서부발전 사장은 고인의 능욕을 중단하고 진실된 사과와 책임지는 행동을 즉각 이행하라.

하청에게 산업재해를 떠넘기고 112억 원을 얻다

사측의 주장대로 이 사고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나? 원청이 하청에 산업재해의 위험을 전가한다는 사실은 엄연히 수치

로 드러난다. 발전5사의 재해자 중 하청의 비율은 97.0%이며 각 발전사의 경우 남동 89.8%, 서부 95.5%, 중부 97.4%, 남부 100%, 동서 97.9%이다.

표1. 최근 5년 간 발전5사 원청 및 하청 재해자 현황

구 분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합 계
원 청	6	2	1	0	1	10
하 청	53	42	38	147	47	327
합 계	59	44	39	147	48	337
하청 비율	89.8%	95.5%	97.4%	100%	97.9%	97.0%



(앞면에서 이어집니다.) 발전5사는 최근 5년 간 모든 사업소(남동5, 서부6, 중부7, 남부7, 동서5)가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약 112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이른바 하청에게 산업재해의 위험을 떠넘기고 1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표2. 최근 5년 간 발전5사가 감면 받은 산재보험료 [단위 : 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남동발전	32,176	26,134	42,889	45,765	46,056	193,020
남부발전	36,896	33,018	39,169	45,628	43,107	197,818
동서발전	50,810	45,147	54,090	57,691	61,933	269,671
중부발전	37,720	38,737	49,135	54,174	51,123	230,889
서부발전	35,181	33,775	46,787	52,821	56,114	224,678
합 계	192,783	176,811	232,070	256,079	258,333	1,116,076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고용이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사고 발생 열흘 전, 그는 ‘비정규직 그만 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의 대화’에 참가하기 위해 손 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그가 죽은 뒤 유가족을 위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빈소를 찾았다. 유가족과 동료직원들은 이용선 수석에게 “만 나 달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사람이 죽어야 오느냐”며 절규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 “사측이 조사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후 시민사회수석을 빈소에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나마 진심으로 애도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상적인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다.

이 사고를 개인의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선 안 된다. 이는 효율이라는 이름의 공기업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부작용이 극히 일부만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현장의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발전사가 직접고용, 직접운영 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막 제대한 스물넷,
누군가의 아들,
대통령과 만나려던 비정규직노동자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남시다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故김용균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2일 (토) 17시 서울도심(추후공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15시 청와대사랑채 앞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